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법과 양심

7월은 우리나라 민주 헌법을 만든 제헌절(17일)이 있는 달이며, 올해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어 발표한 제헌절 제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민주국가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서로 만나 사회와 국가를 이루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나랏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제정하며 국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정치하는 나라가 민주정치 국가며 우리나라는 국법에 따라 정치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국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와 약속을 하느님이 정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양심이며 법보다 앞서 사람이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양심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법관이 재판하기에 앞서 선서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선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지키면 정의로운 사회와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모든 삶을 규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대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법도 없고, 법을 온전히 지키

는 사람도 없다.

물론 법과 도덕과 윤리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틀렸으며, 어떤 일은 해야 하며,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법을 지켜야 할 마음과 양심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제21대 국회는 초반부터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있어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도 그 나라 국민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은 법으로 약용되고 법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하지 마라.”이나 사랑은 “하리”는 것이며 사랑과 양심을 더 귀중히

여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준법정신을 기르려면 법 개정보다 양심개정이 우선됨을 알아야 한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등산객이 지켜야 할 법이며, 쓰레기를 버리는 등산객은 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범법자다. 그러나 무등산의 ‘쓰레기를 줍자.’는 무등산 사랑 광주시민의 양심의 소리며, 쓰레기를 줍는 무등산 사랑 광주시민의 실천은 쓰레기를 버리는 범법자를 무색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법이 아닌 양심을 일깨워 선도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민주 헌법을 비롯한 국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법규 위반자가 많은 부끄러운 나라다. 뿔뿔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법원에서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본을 보이는 선진국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社 說

혼란만 부추기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토론회 의제로 나오자마자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퉀 저마디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민감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자칫 중구난방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권 인사들의 개별 의견은 시장에 던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찬반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반대하는 입장으로 풀이되는데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의 언급이어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려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강구 중인 부동산 대책은 고삐가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의 처방 성격이 짙다.

그동안 쏟아낸 대책들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마치 노선인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강력한 세제 도입과 촘촘한 대출 규제, 지속적인 투기 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택공급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당정이 만나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특정한 결론을 상정하지 않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최종 입장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논란이 가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문재인이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되 밖으로 내놓을 때는 통일된 의견이어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불량’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곳곳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들의 경우 적재불량으로 인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해 급방이라도 화물차가 넘어질 것만 같아 위험천만한 광경을 목격할 적도 있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 행위는 주행 중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치명적인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당국에서도 현장 단속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 및 중량 초과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화물차들의 위반행위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

과로 인해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되면 적재물에 맞는 차량의 피해뿐만 아니라 차량이 적재물을 피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2차, 3차 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중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시 범칙금은 고작 5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해 다수의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류 화물차량들이 증가하는 만큼 화물차 전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태풍을 대비하는 방안들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남부에 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 태풍속 17m/s 이상의 폭풍을 동반하는 자연현상이다. 태풍은 주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며 간혹 10월 이후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매년 여름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근 동아시아까지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은 항상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재산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시킨다.

2019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LINGLING)’은 서해안을 지나 중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사상자는 사망자 포함 27명이나 발생하고 1만 4천 ha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입혔다.

이러한 태풍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특별히 신경 쓰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 뉴스, 라디오

를 통해 언제 태풍이 북상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태풍이 예측되는 날짜에 산간, 하천, 계곡지역의 방문을 피해야 하고 그 장소에 있다가 태풍을 접촉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단단히 결박하고, 깨질 위험이 있는 창문은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는 게 좋다.

태풍이 시작되면 밖으로 외출은 최대한 삼가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안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한다.

공사 중인 공사장,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벼락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휴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수현/보성소방서 별교1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범류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